

전주시의회 의원 5명, 5분 발언 잇따라

하계올림픽 유치 위한 전략적 대응 기반 마련·농아인 소통 쉽터 조성 등 제안



송영진 의원

23일 열린 전주시의회 제42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5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송영진 의원(조촌, 여의, 혁신동)은 “전주시는 2036 하계올림픽 국내 유치 후보 도시로 선정돼 다른 국가와 유치 경쟁을 펼쳐야지만, 도(道)IT특직원 파견뿐 소극적인 대응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송 의원은 △전주시 TF 신설 △IOC 유치 기준 변화에 대응한 독창적 홍보 전략 수립 △민·관 협업 실무위원회 구성을 통한 장기적·전략



채영병 의원

적 대응 기반 마련을 제시했다.

채영병 의원(효자2·3·4동)은 농아인을 위한 ‘소통 쉽터’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채 의원은 “농아인은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정보 사각지대와 사회적 고립에 처해있다”며 “전주시 복지안전망 사업과 농아인의 고립을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고



이병하 의원



최명철 의원

제안했다.

이병하 의원(우아·2, 호성동)은 건지산 맨발걷기길의 설계 개선과 체계적인 관리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이 의원은 “시민의 건강을 위한 공간이 관리 부실과 낮은 시공으로 인한 안전 문제로 오히려 위험이 되고 있다”며 “체계적 관리가 시급한 만큼 조속한 대책을 마련 할 것”을 주문했다.



이성국 의원

최명철 의원(서신동)은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을 비롯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어르신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경로당의 공기청정기와 냉방기기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쉽터가 없는 주택지 어르신들은 무더위에 방치돼 있다”며 “이런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행정은 전수조사와 유지관리 체계 마련, 쉽터 확충 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성국 의원(효자5동)은 생활형 비가림 시설에 대한 현실적인 제도 개선

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생활형 비가림 시설이 현행법상 불법 증축으로 간주돼 과도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전주시는 타 지자체보다 높은 부과 기준을 적용해 형평성 문제가 큰만큼 제도 개선 협의체 구성과 조려 개정을 통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폭염 속 택배노동자 건강·안전 응원

CJ대한통운 전주지점서 현장 지원 캠페인 전개

전주시가 여름철 폭염 속에서도 시민의 일상을 지탱하고 있는 택배노동자를 직접 찾아가 건강과 안전을 응원했다.

23일 시에 따르면, 전주시는 전날(22일) CJ대한통운 전주지점(지사장 고현덕)에서 혹서기에도 쉼 없이 일하는 노동자들의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사기를 북돋기 위한 ‘찾아가는 현장 지원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시가 중점 추진 중인 ‘함께 장터 프로젝트’와 연계해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구성됐으며, 오전 8시 30분부터 약 1



전주시는 22일 CJ대한통운 전주지점에서 혹서기에도 쉼 없이 일하는 노동자들의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사기를 북돋기 위한 ‘찾아가는 현장 지원 캠페인’을 펼쳤다.

시간 동안 진행된 행사에는 약 200명

의 택배노동자가 참여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물·그늘·휴식’ 실천을 바탕으로, 시원한 커피와 생수, 쿨토시 등 보호 용품이 제공됐다.

특히 시는 택배 물량이 많은 화요일 오전 시간대를 활용해 택배노동자들의 자연스러운 참여를 유도했다.

이와 관련 ‘함께 장터 프로젝트’는 전주시의 대표적인 민생경제회복 사업으로, 기업·단체의 기부금으로 지역소상공인에게 선결제한 음료를 이동노동자에게 제공함으로써 노동자 복지와 지역경제 상생을 동시에 실현하고 있다.

시는 이러한 캠페인이 단순한 물품 지원을 넘어 노동자들의 일상에 실질적인 힘이 되는 ‘기 살리기 행적’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는 오는 8월 12일에도 롯데택배 완산센터에서 여름철 폭염 속 택배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권희성 기자

무더위 날릴 도심 속 물놀이장

전주월드컵광장서 ‘한바탕 전주 여름철 물놀이장’ 운영

폭염에 지친 전주시민들의 무더위를 날려 줄 전주 도심 속 대형 물놀이장이 올해도 운영된다.

전주시는 오는 25일부터 8월 3일까지 전주월드컵광장에서 여름방학을 맞은 어린이 등 시민들이 시원하게 놀며 무더위를 이길 수 있도록 ‘한바탕 전주 여름철 물놀이장’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한바탕 전주 여름철 물놀이장에는 유수풀과 워터슬라이드, 영유아용 놀장 등 안전하고 재미있는 물놀이 시설을 갖추고 있다.

또한 물놀이 중간 쾌적하고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탈의실과 무더위쉼터에 냉방시설을 갖춰주며 푸드트럭도 함께 운영된다.

시는 운영 기간 △24시간 여과기 가동 △매일 2시간 간격의 수질검사 △안전관리자·안전요원·간호요원 등 총 19명의 인력 상시 배치 △아간 보안 순찰 등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운영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올해 한바탕 전주 여름철 물놀이장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며, 오후 1시부터 약 1시간 동안은 점점 및 휴식 시간이다.

입장은 오전·오후 회차별 선착순 500명씩 하루 최대 1000명까지 가능하며, 유아와 아동, 청소년(초·중·고), 동반 가족 등 누구



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아이들이 생활권 가까이에서 손쉽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현재 도심 공원 내 물놀이터 및 바닥분수 20곳을 운영하고 있다. 공원 물놀이터와 바닥분수는 오는 8월 말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이영섭 전주시 자원순환녹지국장은 “물여름 가장 더운 시기에 아동을 동반한 가족들이 도심에서 안전하고 즐겁게 물놀이를 즐기며 더위를 날릴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했다”면서 “아이들과 가족 모두가 웃을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출향·전입 청년 채용기업 2곳 추가 모집

전주시가 청년이 찾아오고 머물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출향 청년과 타지역에서 전입한 청년들을 채용하는 기업을 늘려가기로 했다.

시는 출향 또는 전입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에 최대 1200만 원의 고용지원금을 지원하는 ‘출향·전입 청년 채용 전주기업 취업지원 사업’에 참여할 2개 기업을 추가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올해 총 10개의 채용기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남은 2개 기업 분의 추가 청년 채용기업을 선착순 모집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전주시를 떠나 타지역에서 생활 중인 청년(만 18세~39세)이나 전주로 전입한 지 1년 이내인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상시근로자 3인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전주시 소재 기업이다.

상시 고용인원 외에 추가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 중 매월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해야 하며, 자체 채용계획에 따라 청년을 직접 채용한 뒤 신청하면 된다.

단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고용한 청년이 사업 기간 중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전주로 유지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선정된 기업에는 월 100만원씩 1년간 최대 1200만 원이 지원되며, 청년 취업자에게는 2년 연속 시 최대 총합 900만 원의 취업장려금이 별도로 지급된다.

전주시 관계자는 “전주에 정착하고 싶은 청년을 채용할 수 있는 기업을 추가로 모집하고 있으며,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빠르게 신청해주시길 바란다”면서 “이 사업을 통해 청년의 지역 유입과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동시에 도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렸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전인자였다.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반의 논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제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층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